

第252回國會 일자리創出을위한特別委員會會議錄 第 4 號(附錄) (臨時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5年2月28日(月)

場 所 特別委員會會議室(議員會館 101號)

【서면질의 · 답변서】

(질의서)

○홍미영 위원

(재정경제부)

□ 질의요지

- 산업자원부 장관의 업무보고서 미제출, 재정경제부 장관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중심의 정책 마련 필요

(질의)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서민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최우선 민생대책으로 추진해 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참여정부 2년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계층·지역별 구분 없이 참여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등 실업난 해소라는 견해를 밝혔다. 50.6%의 압도적인 주문이었다.

☞ 산업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은 국민과 대통령께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공동인식을 가진 중요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에서는 업무보고서조차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존경하는 임인배 위원장께서 배부해 주신 개회 통지 자료를 보면, 2월23일까지 업무보고서를 해당부처에서 제출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일을 제대로 지킨 부처는 한 곳도 없으며 특히 산업자원부에서는 본 위원실에서 수 차례 제출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정부 측의 안일한 태도가 국민의 요구와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다는 커다란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주요현안보고 자료(1p)를 보면 04년 들어 4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했는데, 이 중 26만 개는 여성 취업자이고 개인서비스업이 17만 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들의 비정규직 여부와 구체적인 고용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신지, 만약 확보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보면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느껴지는 반면, 일자리의 수요를 창출해 지속가능한 고용이 되도록 하기는 무조건 일자리부터 만든다는 공급중심의 사고에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듭니다.

- 특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04년 증가한 42만 개의 일자리 중 약 62%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취업자가 지속가능한 고용이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그들의 상황에 대한 현실성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수요중심의 정책결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 질의 요지

- 실천이 담보된 사회협약이 이뤄져야 한다.

□ 현황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은 지난해 2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해 노사정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체결됐다.

-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5개 분야 49개 항목에 대한 지난해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4개 항목이 완료되고 42개 항목이 정상 추진 중인 등 대체로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구체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으로 제도개선이 완료된 4개 과제는 이행 완료됐으며, 노동위원회법 개정 논의 1개 과제는 이행 착수, 그리고 기업의 인위적인 고용조정 자제와 임금채권 보장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 2개 과제는 점점 결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 활동 규제완화 등 나머지 42개 과제는 ‘일부이행완료 또는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 그러나 지난 1년간의 고용시장과 노사 관계 등을 돌이켜 볼 때, 노사정위원회의 이 같은 실적 발표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 연초부터 금융권의 인력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불이 붙은 노사 간 갈등은 이후 주5일제를 둘러싸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등의 파업을 불러왔고, 노사 간 극단 대립의 양상은 결국 해당 노조간부들에 대한 대규모 사법처리와 해고 등으로 이어졌다.
- 그러나 이 와중에도 노사는 양보를 통한 타협의 길을 모색하기 보다는 각자의 주장만을 되풀이해 여론의 비난을 사고야 말았다.
- 비규정직과 관련해서도 큰 틀에서 노동계의 공감대는 형성했을지언정 정규직 중심의 개별 기업 노조에서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정부 역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청년층 고용안정 등에만 5500억 원 이상 투입하며 실업난 극복에 나섰으나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불구하고, 내실 있는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보다는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진다는 지적이 높다. 이를 통해 총 18만 명 이상의 청년층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 그러나 이들 일자리는 대부분 인턴취업, 연수취업과 같은 단기적인 일자리인데다 이마저도 대부분 공공기관이 주로 활용하면서 민간기업으로부터 외면 받았다.
- 통계상으로는 지난 한 해 동안 40여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나 대부분이 인턴 등 단기취업이었고 그나마 민간기업들은 무관심했다.
- 게다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업자 수는 오히려 전년(2003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질의)

☞ 지난 1년 동안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성

과에 대해,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해 노사정 간 양보와 협조의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평가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비롯된 것인가?

☞ 실천 없는 약속은 속빈 강정이다. 장관! 실천이 담보된 사회협약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 질의 요지

○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따른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현황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한정적인 일자리가 되지 못했던 보육센터, 노인요양시설 등에서의 활동사업을 민간 비영리 단체에 맡겨 정부가 임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 노동부는 이 사업을 통해 올해 장기 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여성 등 취업이 힘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업자 39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 또한 노동부는 빈곤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예산 1500억 원 중 1000억 원 이상을 조기 투입하고 2008년까지 사회적 일자리 8만여 개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문제

하지만 관련 사회단체들은 이 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 특히 문제점 중 하나는 참여 신청을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노동과 안전·보건복지·환경·문화 등의 영역에서 사업당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 전국의 비영리단체 가운데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부담이 가능하면서 한 사업에 10명 이상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갖춘 곳은 희박하다. 겨우 참여자 2~3인씩 정도에 지원이 가능한 현 상황에 비취볼 때 노동부의 이번 지침은 지역단체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임이 분명하다.

○ 또 하나의 문제점은 공익형 사업에서 퇴직금 지급을 단체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방안이다. 사회적일자리는 말 그대로 취업취약계층에게 주어지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만약 이번 사업이 참여자와의 계약기간을 12개월로 늘이면서 퇴직금까지 참여단체가 떠 안게 된다면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다.

-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반드시 최저임금인 월 67만 원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수익형 사업을 통해 임금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대부분이 여성·중고령·장기 실업자 등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에 최저임금을 주면서도 수익을 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에게 잔인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질의)

- ☞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마련한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소위,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계획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 입장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무엇인가?
- ☞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계획에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형 사업의 지원기간과 사업참여 인원의 제한을 철폐하고, 사업 시행기관인 정부가 퇴직금을 부담 또는 일부 보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장관의 견해는?
- ☞ 공익형 사업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으로 훈련개념의 경과적 단기적 일자리 운영을 의미하고 있고, 수익형 사업은 비영리단체가 운영토록 하며 자체적 수익을 발생토록 하는 사업이다.
- 장관! 수익형 사업과 공익형 사업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
- 본 위원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수익형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공익형 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관의 견해는?

(여성부)

□ 질의 요지

- 여성의 경제적 활동의 가장 큰 제약은 육아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영세아 보육!

□ 현황

- ※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간 연장, 방과후 보육 등 취약보육 서비스를 확대
- 시간연장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대상 확대 (2,000명)
 - 21시 30분 이후까지 보육하는 별도 보육교사 채용 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123억 원)
- 방과후 보육시설 보육교사 채용(100명)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보수교육규정을 이수한 별도 보육교사 채용 시 교사 인건비 지원(4억 원)

※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교사 추가배치 지원

- 아동 대 교사비율 조정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2180명, 90억 원)

- 아동 대 교사비율 조정

0세 아동 1 : 5 ⇒ 1 : 3

3세 아동 1 : 20 ⇒ 1 : 15

※ 04년도 신축 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

- 국공립(53개소, 318명), 영아전담(181개소, 1448명), 장애아전담(26개소, 338명) 등 260개 시설에 2104명 인건비 지원(133억 원)

□ 문제점

여성부에서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간 연장·방과 후 보육 등 취약 보육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하나, 여성의 경제적 활동의 가장 큰 제약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보육 중에서도 영세아 보육에 관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도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여성고용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질의)

정부는 각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이나 직장단위로 보육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기업이 여성인력 활용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지원방안은 보육시설 확충과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보험 부담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 그중에서도 특히나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영세아 보육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성부의 현안 보고사항 중 영세아 보육에 관한 아동대 교사비율이 줄은 것이나(0세아동 1 : 5 ⇒ 1 : 3), 영아전담 보육시설의 증대(영아전담-18개소, 1448명)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확충으로 영세아 보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덧붙여 말하자면, 앞으로 더 영세아 보육에 관심을 가지고 보충을 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 질의요지

- 여성고용의 질을 고려하면서, 양적 확대를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현황

여성 취업자의 수가 가장 많은 연령층은 40대 초반이지만 이는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고용정보원의 2003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1)에 따르면 여성취업자는 20대 초반까지 늘다가 20대 후반 이후 결혼과 육아 등으로 줄기 시작해 30대 초반에 최저점을 기록한 뒤 30대 후반부터 재취업에 나서기 시작해 40대 초반에 최고점을 보였다.

- 그러나 40대 초반 여성들의 취업형태는 비정규직이 42.7%를 차지해 20대 후반 비정규직 비율(20.3%)에 비해 배 이상 높았다. 비정규직의 경우 직종도 20대 후반의 학원강사, 고객상담, 통신판매 등에서 40대 초반에는 주방보조, 접객, 파출부, 가사보조, 보험모집인, 청소원 등 단순노무직이 주를 이뤘다.
- 정규직의 경우 20대 후반에는 경리, 간호사, 상점판매원, 회계사무원, 초등교사 등이 많았으나 40대 초반에는 중등교사, 재봉사, 초등교사, 단순노무직 등으로 바뀌었다.
- 또한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힌 대졸 여성 취업률은 47.9%였다. 그럼에도 중앙일보 조사 결과 대졸 취업 여성 중에서 대기업 취업률은 22.4%에 머물고 있다.

□ 문제점

여성들의 취업 양적 확대는 근소한 차이이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들의 고용의 질은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다. 특히 여성들이 20대에 활발한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 등으로 일단 퇴출된 뒤에는 재취업 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가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사회적 선입견 등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갖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더불어 질적 내용은 별개로 하고 양적인 확대만을 가지고 여성 고용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편견이나 언론보도가 확산되고 있다.

(질의)

☞ 여성부장관께 묻습니다.

장관께서는 “여성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철도청의 경우를 예를 들어 애길 하면 “새마을호 정규직승무원의 90% 이상을 남자로,

계약직은 모두 여성으로 고용해 동일한 노동을 시키면서 임금·해고·퇴직에서 계약직 여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함으로써 고용형태와 성별에 따른 차별”을 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의 고용에 있어서 양적확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질적 내용입니다. 장관님도 이에 동의하시죠?

☞ 그렇다면, 여성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여성 고용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작업 및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홍준 위원

(노동부)

□ 청년 실업 심각

-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경기침체 심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며, 일자리 감소와 청년실업 등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요즘 사회에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전에는 56세 정년(오륙도)에서 45세 정년(사오정), 얼마 전에는 38세에 회사에서 나온다고 삼팔선, 최근에는 ‘이십대 태반이 백수다’란 뜻으로 이태백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어려운 우리 경제 현실을 반영한 말들입니다. 이러한 현실이니 경기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05년 1월 고용동향지표를 살펴보면, 전체 실업률은 3.9%로 작년 12월과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0.2% 높아졌습니다.-(별첨 1)
-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 동안의 실업률 변화 추이를 알려주시고, 공식적으로 통계로 취합되고 있지 않는 잠정적 실업률도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15~29세의 청년층 취업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15~29세 청년층의 실업자는 2004년 1월 - 44만 9000명으로 전체 대비 8.8%였고, 2005년 1월 - 43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 증감하였습니다. 겨우 0.1% 떨어졌습니다.-(#별첨 2)
- 어떤 이유에서 청년층의 실업률이 거의 제자리 걸음인지, 정부의 노력에 대해 자체평가는

1) OES는 중앙고용정보원이 2001년부터 해마다 실시하는 가구단위 조사로서 표본 추출된 5만 가구에 거주하는 취업자 7만여 명으로부터 조사된 직업(384개)과 산업(196개)별 고용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

어떠한지, 그리고 청년층의 실업에 대해 정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NGO를 비롯한 각 유관단체와의 정책적 네트워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정책집행 내역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층의 실업률이 거의 제자리라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2004년에 청년실업대책으로 6057억 원을 배정하였고, 그 집행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첨 3)
- 책정된 예산에 대한 그 집행내역과 실집행 상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

-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증대 필요
 - 대기업은 유지라든가 지속적인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일자리창출의 한계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 하지만 올 들어 불거진 기아차 광주공장 채용비리 사건을 들여다보면, 취업 희망자들은 일반 중소기업보다는 높은 임금과 안정된 자리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는 대기업 직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조사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일단 자리부터 만든다라는 공급 중심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앞으로 지속적인 고용창출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해 줘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 그리고 3D(위험하고-dangerous, 더럽고-dirty, 어렵고-difficult)업종을 꺼린다는 것이 이제는 일자리의 방정식처럼 고착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그러므로 현재 정부에서 취업 희망자들이 3D 업체를 꺼리는 본질적인 요인이 무엇이

라고 파악하고 있는지와, 3D업체는 기업 활동의 동력인 실질적 자양분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현정부에서 취한 정책 및 이에 대한 실적평가 자료가 있다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기 수립된 계획이나 추진방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부총리겸재경경제부장관 이현재

(홍미영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작년에 42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이중 26만 개는 여성, 17만 개는 개인서비스업이라고 지적하시고 이들의 비정규직여부와 고용환경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작년에 증가한 42만 개의 일자리는 지난 1년간 노동시장에서의 업종별·분야별 취업자 증감 과정을 거쳐 나타난 결과치로
 - 경제 내의 특정 일자리를 신규 일자리로 분리하여 그 일자리의 성격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 통계청이 매년 1회 발표하는 경향부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략의 자료를 말씀드립니다.
- 04년 비정규직은 539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79만 명 증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중 여성은 266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34만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196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32만 명 증가했습니다.
- 작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근로조건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임금 :
 - 정규직
(03)167.8만 원 →(04)177.1만 원 : 9.3% 인상
 - 비정규직
(03)102.8만 원 → (04)115.2만 원 : 12.4% 인상
 - ※ 고용보험 가입자
 - 정 규 직
(03)570만 1000 명→ (04)565만 5000 명
 - 비정규직
(03)134만 7000 명 → (04)194만 6000 명

작년 증가한 여성취업자가 지속가능한 고용이 되기 위해서는 수요중심의 정책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고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정부는 여성 잠재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의 계층별, 생애주기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선 취업을 희망하나 경력 단절 등으로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여성을 위해 방과 후 아동지도사, 재활간호 등 여성 친화적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고학력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 ※ 04년 문화예술관광 코디네이터(강릉대), 남도음식문화디자인(동신대), 컨벤션산업 전문인력(신라대), IT 마스터(숙대) 과정 등
 - 여대생에 대한 체계적 취업교육 및 학교-노동시장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창업을 원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홍미영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지난 1년동안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성과에 대해, “일자리만들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해 노사정 간 양보와 협조의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평가한 근거가 무엇인지 물으셨음
- 03년 말부터 노사정위원회는 투자감소, 양극화, 청년실업 등 고용불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04.2.10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은 고용안정·임금안정·노사협력, 부문 간 근로조건의 격차완화, 불법행위 근절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원칙적 합의를 포함하고 있어
 - 그 자체로 개별사업장의 임·단협 과정에서 노사갈등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
 - ※ 04년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약 42만 명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 개선, 평균임금 인상률도 전년동기(6.4%)보다 1.2%p 하락한 5.2%로 안정

- 또한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종합대책」 및 지역·업종단위 사회협약 확산 등으로 연결되는 성과
 - ※ 55개 지역, 1개업종(항운)에서 협약체결, 공동평화선언
- 사회협약이 고용창출 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계량화하기는 어려우나 지난해 노사관계 안정 분위기 확산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 향후 지역·업종단위의 협력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해 사회협약 정신의 확산을 지속 추진할 계획

2. 실천이 담보된 사회협약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물으셨음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협약은 실천이 담보될 때 진정한 의미가 있음
- 금년에는 사회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만들기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이행실태를 점검하고(3회) 지속 보완해 나가고 있음
 - ※ 일자리만들기위원회 : 총리 주관, 재경부 등 10개 부처, 경제 5단체, 노동단체, 언론·시민단체 대표 등 27명으로 구성
- 금년에는 사회협약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는 한편 노동정책 전반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
 - ※ 청년실업대책, 사회적 일자리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및 직업훈련 지원 등
- 아울러 04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취지가 지역·업종 단위로 확산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할 계획
 - 중앙·지역·업종·기업 단위의 노사(정) 대화와 협의를 활성화하여 노사정 파트너쉽 기반을 구축
 -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협력프로그램도 개발·지원

3.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계획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 입장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우리사회에 부족한 사회 서비스 확충과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고용정책으로서 03년부터 시범실시

- 그러나, 시범사업 실시 결과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 시행주체가 별도의 수익구조 없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지원중단과 동시에 고용도 중단되는 공공근로성 저임금 단기일자리를 양산한다는 점과,
 - 지원된 인력이 단체의 실무인력 보조에 그쳐 사회 서비스 창출효과가 미흡하다는 점 등임
 - ※ 이는 비영리단체의 수요 폭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업에 소수의 인원(04년의 경우 평균 3명)만을 배정했기 때문
- 이에,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05년부터는 수익형 일자리 집중지원, 사업규모 제한 등 지침 일부 변경
 - ※ 청와대 국정과제 『일을 통한 빈곤탈출』(04.11)에서 마련된 사회적 일자리 중장기 발전방안을 05년 시행지침 개정 시 반영
 - 변경내용에 대하여 일부 비영리단체들의 불만이 있으나, 동 사업의 취지 및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4.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계획에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형 사업의 지원기간과 사업참여 인원의 제한을 철폐하고, 사업시행기관인 정부가 퇴직금을 부담 또는 일부 보조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05년부터는 수익형 사업을 집중지원하고 모든 사업의 규모를 최소 10명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 ※ 공익형은 지원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반면, 수익형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3년간 계속 지원하고, 심사 시 가점부여
 - 일자리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서비스 창출역량이 있는 단체 중심의 지원으로 신규 사회 서비스 창출 도모
- 이에 따라 그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온 단기 일자리 및 단체 실무인력 보조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 향후 예상되는 비영리 단체들의 불만사항은 지속적인 홍보·설득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음
- 한편, 동 사업은 비영리단체 인력지원 사업이

- 아니라 비영리단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므로,
- 참여단체는 참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퇴직금 지급의무 등 제반 의무를 부담하게 됨

5. 수익형 사업과 공익형 사업의 비율은?

- 05년 사업 선정결과 총 348개 단체의 3699명이 선정되었으며,
 - 이 중 공익형 사업이 2330명, 수익형 사업이 1369명이 선정되어 공익형 사업이 전체의 63%를 차지
 - ※ 04년의 경우 공익형 사업의 비중은 전체의 89.6%를 차지

6. 본래의 취지에 맞게 수익형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공익형 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취지는 우리사회에 부족한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 정부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복지사업을 확대하거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사업 시행결과 단기 일자리가 양산되고 사회서비스 확충효과도 떨어지는 등 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부분이 지적되어 이를 본래 취지에 맞도록 점진적으로 개선
 - 따라서 사업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향후로도 이러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필요
- 다만, 급격한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 공익형·수익형 사업을 당분간 병행 실시하면서 단계적으로 수익형 사업의 비중을 높여나 가도록 하겠음

(안홍준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최근 5년 동안의 실업률 변화 추이 제공 및 공식적 통계로 나타나지 않는 잠정적 실업률도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최근 5년 동안의 실업률 변화 추이

(단위 : 천 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 실업자	913	845	708	777	813
(실업률)	(4.1)	(3.8)	(3.1)	(3.4)	(3.5)
청년 실업자	402	388	341	383	391
(실업률)	(7.6)	(7.5)	(6.6)	(7.7)	(7.9)

※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통계청)

□ 실업률은 ILO 및 OECD 기준에 따라 각각 작성·발표

○ 우리나라의 공식 실업률은 국제적 표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으며 구직단념자 등을 실업률에 포함시키는 국가는 없음

※ 우리나라의 05년1월 ILO기준 실업률은 3.9%, OECD 기준으로는 4.2%

※ 구직단념자는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거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 다만, 공식 실업률 외에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구직 단념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등을 포함시킨 노동력의 불완전 활용도(underutilization)에 관한 보조지표를 작성

※ 미국은 76년부터 사용해 오던 실업률 대체 지표들을 94년에 6가지(U1~U6)의 노동력 불완전활용지표로 대폭 개편하여 발표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위한 여러 보조지표를 작성·공표

○ 통계청은 실업률 외에 18시간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98.5), 구직 단념자(99.11), 구직 기간별 실업자(00.1) 통계를 조사·발표

○ 향후에도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지표를 개발·보완할 계획임

- 참고로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가장 범위가 넓은 U-6 방식으로 산정한 결과 04년 약 7.8%

※ 최광의의 노동력불완전활용지표 = [4주 실업자+비자발적 36시간 미만 취업자+구직단념자+기타한계근로자]/[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기타 한계근로자]

○ 정부는 03년9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실업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노사정 역시 04년2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 실업 문제 해결에 공동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바,

- 청년실업이 청년층 일자리 감소, 대졸자 공급 증가, 체계적인 직업지도·직업교육 부족, 노동시장 인프라 취약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랜 취업소요기간(11개월)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고 사료됨

○ 따라서, 정부에서는 그간의 청년실업대책이 단기대책 중심이었다는 지적 등을 반영하여 일시적 실업완화를 위한 단기대책보다는

- 학교-노동시장 간 이행 원활화를 중심으로 청년층 고용을 중장기적·지속적으로 촉진·안정시키기 위한 청년고용촉진대책을 최근 수립(05.1.28)하였음

○ 또한, 정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실업대책 T/F』 논의, 대학생·청년실업자·청년취업 업무담당자·기업인 등의 의견 수렴, 청년실업종합대책 평가, 국회·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청년고용촉진대책을 마련하였고

- 특히, 노사 및 시민단체·교육계·여성계·청년실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와 『청년실업대책실무위원회』 등에서 “학교-노동시장 이행 강화방안”, “청년고용촉진대책(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 05.1.28 제3차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개최, 청년고용촉진대책 확정

※ 05.1.20 제2차 청년실업대책실무위원회 개최, 청년고용촉진대책 논의

- 앞으로도 상기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심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 청년 실업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와 정부 노력에 대한 자체 평가는 어떠한지, NGO 등 유관단체와의 정책네트워크 및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심

3. 청년 실업에 책정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과 실집행 상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청년실업종합대책 추진실적(04년말) - 붙임

【붙임】

<청년실업종합대책 추진실적(04년)>

(단위 : 억 원, 명, %)

사업명	재원(예산)			소관부서
	계획	실적	진도	
합 계	5,643	5,848	103.6	
<연수체협>	1,426	1,632	114.4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846	1,052	124.3	노동부
이공계미취업자현장연수	300	300	100.0	산자부
신진연구자 연수지원	230	230	100.0	교육부, 산자부
중소기업체험활동 1)	40	40	100.0	중기청
IT인력 해외연수 지원	50	50	100.0	정통부(기금)
<직업훈련>	1,972	2,011	102.0	
취업유망분야훈련※	410	508	123.9	노동부
무역인력교육	13	13	100.0	산자부
문화산업 전문인력 교육	31	31	100.0	문광부
창업강좌 등 1)	50	42	84.0	중기청
중소기업청년채용 패키지	191	191	100.0	중기청
제대예정 사병 직업훈련 2)	10	0	0.0	국방부
정부위탁훈련	903	900	99.7	노동부(기금)
기능사 양성 특별훈련	285	247	86.7	노동부(기금)
저소득청소년 S/W기술교육 1)	39	39	100.0	정통부(기금)
<일자리제공>	1,493	1,453	97.3	
구인업체 개척	56	52	92.9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	187	203	108.6	노동부
지식정보자원관리	470	470	100.0	정통부
연극·국악·영화시간제 강사풀	65	65	100.0	문광부
신기술 중소기업인력지원	100	100	100.0	산자부
군 부사관 인력지원	250	250	100.0	국방부
시간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7	14	82.4	문광부(기금)
문화산업 인력지원	129	125	96.9	문광부(기금)
국민연금공단 상담도우미	219	174	79.5	복지부
초·중등 전산보조원 3)	-	-	-	교육부
<해외연수·취업지원>	464	464	100.0	
청년 무역인력양성	20	20	100.0	산자부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	85	85	100.0	중기청
해외취업지원	137	137	100.0	노동부
해외봉사단 파견	222	222	100.0	외교부
<인프라 확충>	288	288	100.0	
청소년 취업지원실	96	96	100.0	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20	20	100.0	노동부
청년창업보육지원	60	60	100.0	중기청
학교기업육성	100	100	100.0	교육부
인적자원종합정보망	12	12	100.0	교육부

1) 지원기간 1개월 미만인 사업(중소기업체험활동, 창업강좌, 저소득S/W기술교육)은 인원산정에서 제외

2) 제대예정사병 직업훈련의 경우 7억은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험교재 구매, 3억은 취업교육용 CD 제작·배포에 사용할 계획(안)이며, 3,770명은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합격자 수

3) 초·중등전산보조원은 인원산정만 포함(예산은 지자체 자체재원이므로 미포함)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취업유망분야훈련,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3개 사업은 04년 예산액 외에 03년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집행하였기에 계획 대비 실적이 초과됨

**○여성부장관 장하진
(박순자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청년여성층 연령별 실업률 통계자료를 요청 하셨습니다.

청년여성층 연령별 실업률 통계 (01~04)
(단위 : %)

구분 연령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비고
15-19세	12.3	9.9	10.9	12.7	
15-24세	8.1	7.0	8.5	8.9	
15-29세	6.2	5.3	6.5	6.6	
20-29세	5.6	4.8	6.1	6.2	

※ 연령별로 구분한 이유는 청년여성층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임

(홍미영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영세아 보육에 관한 아동 대 교사비율의 축소, 영아전담 보육시설의 증대만으로 영세아 보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성부의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 정부는 영아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아전담보육시설을 신축하거나 지정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세아의 경우 1인당 보육비용이 높아 보육시설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영세아를 비롯한 영아보육을 실시하는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 확대 ('04년 15만 원, 18,410반 ⇒ '05년 42~45만 원, 31,143반)

○ 영아보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들이 영세아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동안 영세아를 중심으로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정보육교사의 자격, 연수 및 관리체계, 비용부담 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시범실시 등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한 후 실시여부를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성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여성고용의 질적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작업 및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 우리부에서는 여성고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정규직 중심의 안정된 일자리로의 취업지원과 여성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중점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03년도부터 여대생들의 재학 중 취업준비를 지원하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지원사업」과 미취업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를 실시하는 「지역사회맞춤형취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동 사업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전국 확산>, <50% 내외의 높은 취업률 달성> 등의 성과로 청년여성층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취업지원사업의 성공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입안 시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협력하여 성차별 및 모성보호 등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 김성진

(안홍준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서서는 중소기업이 앞으로 지속적인 고용창출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증대되어 왔습니다.

○ 반면, 대기업은 지속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종사자수(천 명) : (97)8,260 → (02)10,385 → (03)10,474

※ 대기업 종사자수: (97)2,837천 명→(03)1,566천 명

□ 고용없는 성장시대, 중소기업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 기업가 혁신 마인드 고취, 창업절차 간소화 및 창업지원을 통해 창업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유도하고

○ 창업 이후 성장을 통한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성장 및 경쟁력 향상 지원하며

- 특히, 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여, 고수준(High quality)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창업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 인·허가 관련기관 공동으로 창업민원처리 협의회를 설치하여 창업규제를 상시발굴하고 개선토록 하며
 - 창업교육을 차별화·전문화하고, 창업보육센터(291개)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보육기능을 내실화 등을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 성장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 무역촉진단 파견 및 전용 홈쇼핑 확보 등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시장수요를 창출하고
 - 기술혁신개발자금 출연(1,422억 원) 및 KOSBIR(공공기관의 기술개발지원제도) 이행력 제고 등을 통해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 또한, 대·중소기업 간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 System) 도입 및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 08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투자 모태펀드를 조성해 벤처창업 등에 투자토록 하며,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투자유치(100개사, 3,000만 불)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창투사의 설립·운영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벤처캐피탈의 투자활력을 제고토록 할 것입니다.
 - ※ 창투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최소 100억 원) 및 전문인력(최소 3인) 요건 완화

위원님께서서는 취업희망자들이 3D업종을 꺼리는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D 업종에 대해 청년층 등은 취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 취업기피의 근본원인은 청년층이 가치 있는 일 보다는 편하고 쉬운 일을 선호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 3D 업종에 대한 인력유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 조명·방호설비·작업환경설비 등의 개선을 통하여 작업장 환경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고(04 : 700억 원 → 05 : 1000억 원)
- 열·분진·냄새 등 생산현장의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장비(예 : 염료 자동계량 장비)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또한 3D 업종의 생산시설의 자동화·정보화 촉진을 통해 근본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 설계부터 구매·생산까지 제조공정의 e-메뉴팩처링 체제 구축
 - ※ 컴퓨터통합생산(CIM), 제조실행시스템(MES),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등을 도입 지원